16-32호 2016.7.26

현안과 과제

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
-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의식 조사

현대경제연구원

■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

목 차

■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

-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의식 조사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개요 ····· 1

2. 조사 결과 ····· 2

< 별첨 >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····· 8

Executive Summary

<요 약>

■ 개요

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의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의 전문가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■ 조사 결과

(최근 남북관계 현안) 전문가들 10명 중 4명(44.4%)은 북한이 8.15 광복 71주년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 이에 대해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(90.0%)은 북한이 상봉 행사를 제의할 경우 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절반 가량의 전문가들(47.8%)은 관련 대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상봉 행사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도 42.2%에 달했다.

한편, 전문가들 10명 중 6명(58.9%)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.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,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과의 친선 외교를 통해 외교적·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 또한, 다수의 전문가들(73.3%)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.

(전문가 통일의식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(97.8%)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,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들은 전년도에 이어 '완전한 통일(30.0%)'보다는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(44.1%)'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 전문가들의 상당수(69.0%)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. 전문가들 3명 중 2명(63.4%)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했으며, 전문가의 과반(57.7%) 이상이 연간 11만원 이상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) 2015년 조사에 비해 미국(2015.7 63.2% → 2016.7 54.4%)의 통일 영향력에 대한 비중은 축소된 반면, 중국(동 기간 36.8% → 45.6%)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, 과반수 이상(51.1%)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하고 있으며, 2015년 조사에 비해 비호감도는 6.3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. 개요

○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의식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

- **조사 시기** : 2016년 7월 11일 ~ 19일 (9日 간)

- **조사 방법** : 설문지 조사

- **조사 대상**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93명

- **표본 오차**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- **조사 내용** :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비롯해,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, 통일비용 부담 의사,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등을 조사

<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설문 내용
① 최근 남북관계 현안	-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제안 가능성 -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-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가능성 - 북한 5차 핵 실험 가능성
②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	- 통일의 필요성 - 통일의 편익 - 통일의 형태 - 통일예상시기 -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 - 통일비용 부담 의사
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	-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나라 -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나라 -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나라

주 :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이전 조사(2011.11, 2012.10, 2013.11, 2015.7)와 비교 분석하였음.

2. 조사 결과

① 최근 남북관계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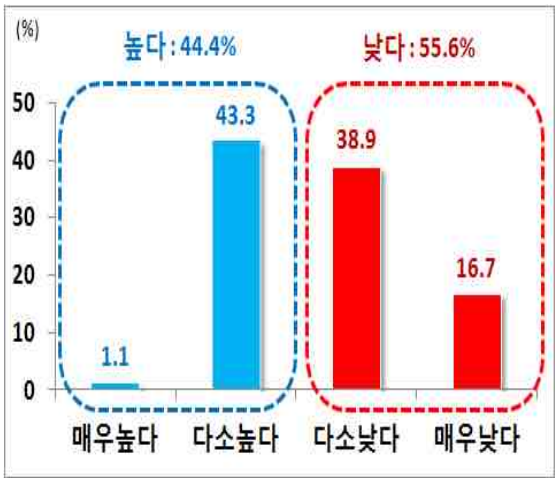
○ (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가능성) 전문가들 10명 중 4명은 북한이 8.15 광복 71주년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- 절반 이상(55.6%)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으나,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상당수(44.4%)임
  - 북한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 개최 이후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8·15 기념 남북 연석회의 제안 등 대화 공세를 지속
  - 이산가족 상봉은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·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높은 사업으로 북한이 先제안할 가능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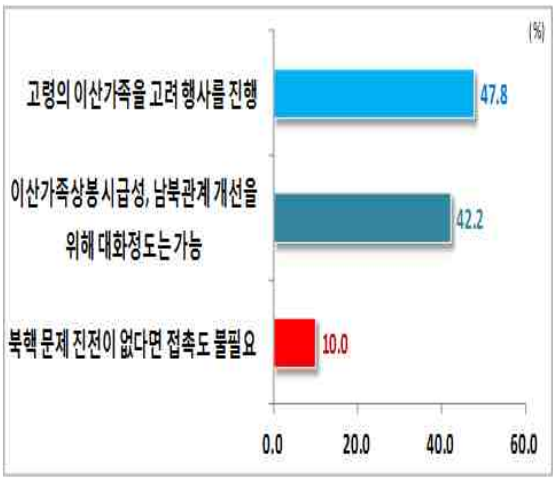
○ (우리 정부의 대응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할 경우 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

- 절반 가량의 전문가들(47.8%)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,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도 42.2%에 달함
  - 이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고려한 상봉의 시급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[1)]

<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가능성 >



< 우리 정부의 입장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1) 한편, 2016년 4월말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839명 가운데 사망자가 50.5%(6만 6,072명)에 달해 생존자(6만 4,767명, 49.5%)를 넘어섬. 현대경제연구원, "2016년,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", 『통일경제』 2016.제1호, p. 4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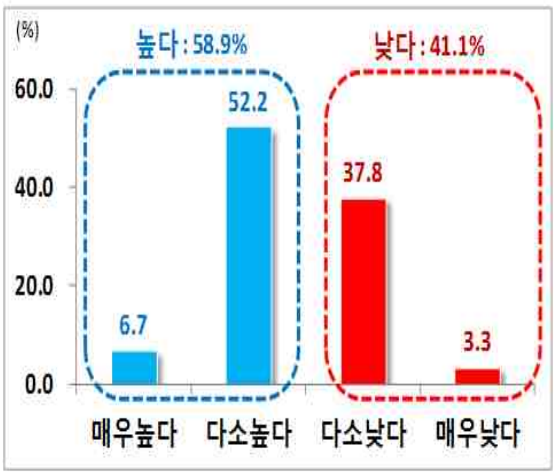
○ (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) 전문가들 10명 중 6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- 상당수의 전문가들(58.9%)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對북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
  · 지난 5월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지속 제기
  · 북한은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,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과의 친선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외교적·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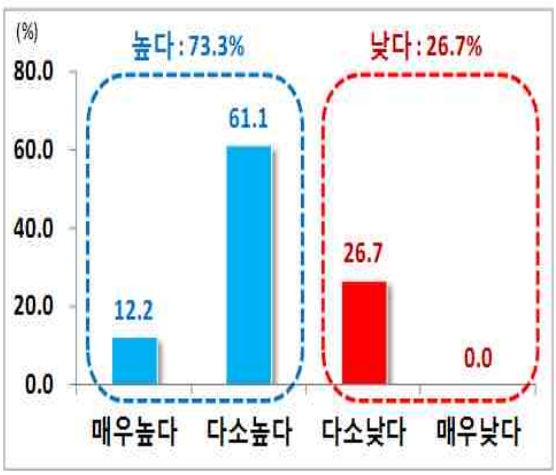
○ (북한 5차 핵실험 가능성)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- 다수의 전문가들(73.3%)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  ·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및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첫 인권 제재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우려가 존재
  · 이와 관련,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"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"고 밝힘(7.18)

<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가능성 >



< 북한 5차 핵실험 가능성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②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

○ (통일의 필요성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

- **2013년 이후 현재까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**
  - "귀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" 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97.8%가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필요 없다는 의견은 전무했고, 모르겠다는 의견은 2.2%에 불과함
  -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가들 모두 크게 공감

< 통일의 필요성 >

(%)

구분	2013.11	2015.7	2016.7
필요하다	98.1	97.7	97.8
필요없다	0.0	0.0	0.0
모르겠다	1.9	2.3	2.2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3.11, 2015.7, 2016.7.

○ (통일편익)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편익에 대해 긍정적 평가

- **"귀하께서는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손해가 된다고 보십니까?"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대 다수인 97.8%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**
  - 손해가 된다는 의견은 0%였고, 모르겠다는 의견은 2.2%에 불과

< 통일편익 >

(%)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
도움이 된다	96.2	98.0	97.7	97.8
손해가 된다	3.8	1.0	1.1	0.0
모르겠다	0.0	1.0	1.1	2.2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.

○ (통일의 형태) 전문가들은 전년도에 이어 '완전한 통일(30.0%)'보다는 '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(44.1%)'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

- 전문가들의 응답 가운데 '완전한 통일'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, '1국가 2체제 평화공존'에 대한 응답률은 2015년 결과보다 증가
  - "통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어떤 수준의 통일을 원하시는지요?"라는 질문에, '1국가 2체제 평화공존'(44.1%)에 가장 높게 응답
  - '1국가 2체제 평화공존'을 선호하는 의견의 경우 '1국가 2체제'에서 남북한 '완전한 통일'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

< 통일 형태 >

(%)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
남북한 완전한 통일	27.8	**41.0**	31.0	30.0
1국가 2체제 평화공존	**43.0**	34.3	**43.7**	**44.1**
자유로운 왕래수준	27.8	23.8	25.3	24.8
현 상태도 괜찮다	1.3	1.0	0.0	1.1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.

○ (통일예상시기)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했고, 특히 전년에 비해 비관적 응답 비중이 증가

- "귀하께서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?"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상당수(69.0%)가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
  - 특히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도의 59.8%에 비해 9.2%p 증가

< 통일예상시기 >

(%)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
5년 이내	6.3	5.7	4.6	4.4
6~10년	29.1	23.8	31.0	24.4
11년 이상	**63.3**	**68.6**	**59.8**	**69.0**
불가능하다	1.3	1.9	4.6	2.2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.

○ (통일세 신설)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세 신설에 긍정적 응답

- 전문가 3명 중 2명(63.4%)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
  · "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통일 재원이 필요합니다. 귀하께서는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(통일계정)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"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63.4%가 찬성한다고 응답
  · 특히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'찬성' 응답 비율이 소폭 증가

< 통일세 신설 >

(%)

구분	2011.11	2015.7	2016.7
찬성한다	54.3	63.2	63.4
반대한다	45.7	31.1	33.3
모르겠다	0.0	5.7	3.3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5.7, 2016.7.

○ (통일비용 부담 의사) 전문가의 과반(57.7%) 이상이 연간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했고, 특히 연 51만원 이상 부담 비중이 증가

- 2015년 결과에 비해 '연 51만원 이상'을 부담하겠다는 비중이 8.3%p 증가
  ·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, 연 10만원 이하 비율은 감소한 반면(2015년 49.4%→2016년 42.3%), 연 11만원 이상(연 11~50만원+연 51만원 이상) 비율은 증가하였음(동기간 50.6%→57.7%)

< 통일비용 부담 의사 >

(%)

구분	2011.11	2013.11	2015.7	2016.7
부담하고 싶지 않다	10.1	2.8	5.7	6.7
연 1만원 이하	13.9	2.9	11.5	5.6
연 2~10만원 이하	32.9	27.6	32.2	30.0
연 11~50만원 이하	36.7	42.9	34.5	33.3
연 51만원 이상	6.4	23.8	16.1	24.4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1.11, 2013.11, 2015.7, 2016.7.

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

○ (통일 영향력) 전문가의 과반수가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나, 비중은 2015년 조사에 비해 축소

- 미국(2015.7 63.2%→2016.7 54.4%)의 통일 영향력 비중은 축소된 반면, 중국(동기간 36.8%→45.6%)의 영향력 비중은 확대

○ (통일 호감도) 한반도 통일 영향에 대한 미국의 호감도가 상승한 반면,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

- 전문가들은 미국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국가로 평가
  · 호감도 상승 : 2015년 49.5%→ 2016년 57.8%로 8.3%p 상승
  · 비호감도 하락 : 2015년 25.3%→ 2016년 23.3% 2.0%p 하락

-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국가이나, 한편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
  · 호감도 하락 : 2015년 42.5%→ 2016년 36.7%로 5.8%p 하락
  · 비호감도 상승 : 2015년 44.8%→ 2016년 51.1% 6.3%p 상승

-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(2015년 27.6%→2016년 25.6%)

< 각 국가별 통일 호감도 >

(%)

구분		2012.10	2013.11	2015.7	2016.7
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	미국	68.2	56.2	49.5	57.8
	중국	18.8	38.5	42.5	36.7
	일본	1.4	0.0	0.0	0.0
	러시아	11.6	5.3	8.0	5.5
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나라	미국	11.3	28.0	25.3	23.3
	중국	69.0	55.0	44.8	51.1
	일본	19.7	17.0	27.6	25.6
	러시아	0.0	0.0	2.3	0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2012.10, 2013.11, 2015.7, 2016.7.

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이용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
< 별첨 >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

○ 조사 개요

- **조사 시기** : 2016년 7월 11일 ~ 19일 (9日 간)

- **조사 방법** : 설문지 조사(지난분기 대비 현재 남북관계 현황)

- **조사 대상**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93명

- **표본 오차**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○ 조사 내용

- **북한의 4차 핵실험(2016.1.6)이 있었던 지난 1분기에 비해 소폭 호전됐지만 여전히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이 우세**

1. 정치·군사 관계

1-1)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9.1	80.0
2. 그렇지 않다	39.8	17.0
3. 보통이다	1.1	3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1-2)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60.2	77.0
2. 그렇지 않다	38.7	21.0
3. 보통이다	1.1	2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1-3)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8.7	63.0
2. 그렇지 않다	45.2	35.0
3. 보통이다	10.8	2.0
4. 그렇다	5.4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1-4)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.2	12.0
2. 그렇지 않다	19.4	28.0
3. 보통이다	40.9	49.0
4. 그렇다	34.4	10.0
5. 매우 그렇다	2.2	1.0
계	100.0	100.0

1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정치·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8.1	74.0
2. 그렇지 않다	38.7	22.0
3. 보통이다	3.2	3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1.0
계	100.0	100.0

1-6) (전망) 남북 간 정치·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9.8	28.0
2. 그렇지 않다	51.6	48.0
3. 보통이다	8.6	18.0
4. 그렇다	0.0	6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2. 경제적 관계

2-1)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66.7	84.0
2. 그렇지 않다	31.2	14.0
3. 보통이다	2.2	2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2-2)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8.3	40.0
2. 그렇지 않다	45.2	31.0
3. 보통이다	24.7	21.0
4. 그렇다	9.7	7.0
5. 매우 그렇다	2.2	1.0
계	100.0	100.0

2-3)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2.6	39.0
2. 그렇지 않다	43.0	41.0
3. 보통이다	24.7	18.0
4. 그렇다	9.7	1.0
5. 매우 그렇다	0.0	1.0
계	100.0	100.0

2-4)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1.8	20.0
2. 그렇지 않다	34.4	44.0
3. 보통이다	37.6	31.0
4. 그렇다	14.0	5.0
5. 매우 그렇다	2.2	0.0
계	100.0	100.0

2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61.3	73.0
2. 그렇지 않다	35.5	24.0
3. 보통이다	3.2	3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2-6) (전망)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3.0	31.0
2. 그렇지 않다	46.2	51.0
3. 보통이다	10.8	16.0
4. 그렇다	0.0	2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3. 사회・문화・인도적인 관계

3-1)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(문화,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)가 활발해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7.0	74.0
2. 그렇지 않다	39.8	21.0
3. 보통이다	3.2	5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3-2)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7.3	59.0
2. 그렇지 않다	47.3	36.0
3. 보통이다	5.4	5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3-3)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0.5	71.0
2. 그렇지 않다	45.2	25.0
3. 보통이다	4.3	3.0
4. 그렇다	0.0	1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3-4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2.7	71.0
2. 그렇지 않다	45.2	27.0
3. 보통이다	2.2	2.0
4. 그렇다	0.0	0.0
5. 매우 그렇다	0.0	0.0
계	100.0	100.0

3-5) (전망)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	1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5.2	32.0
2. 그렇지 않다	46.2	48.0
3. 보통이다	7.5	15.0
4. 그렇다	1.1	4.0
5. 매우 그렇다	0.0	1.0
계	100.0	100.0